

2016 국회8급 행정학 (2016.5.21 시행)

01. 다음 중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다.
- ② 조례를 정할 때,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③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안된다.
- ④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 ⑤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답] ①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지방의회라야 맞다. 지방의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자치단체장은 법령과 조례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2016 7급 선행정학 p.749

☞ 2016 9급 선행정학개론 p.667

02. 다음 중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세항·목 간에 금액을 상호융통하는 것이다.
- ② 예산의 이체는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예산의 귀속을 변경시키는 것이다.
- ③ 계속비는 세출예산 중 미지출액을 당해 연도를 넘겨 다음 연도에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④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되는 것을 말한다.
- 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편성하는 것이다.

[답] ③ 계속비가 아니라 이월에 해당한다.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는 경비를 말한다.

● 예산집행의 통제와 신축성 유지방안

구분	특징
재정 통제	예산의 배정
	배정: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분
	재배정: 중앙관서의 장이 산하기관의 장에게 예산을 다시 배분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통제: 재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대한 통제
정원·보수에 대한 통제	중앙인사기관장과 중앙예산기관장과의 협의

신축성 유지	예산안편성지침	예산안편성준칙의 시달
	통합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을 총 망라하여 편성
	총사업비제도	개개의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총괄적으로 관리
	이용	입법과목(장·관·항)간에 상호융통(국회의 의결을 요함)
	전용	행정과목(세항·목)간에 상호융통
	이체	예산의 책임소관 변경
	이월	다음 연도로 넘겨서 예산을 사용(명시이월·사고이월)
	계속비	수년간 예산지출(5년 이내)
	예비비	예산외의 지출 및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
	긴급배정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
	추가경정예산	예산 성립 후 추가로 편성된 예산
	준예산	예산 불성립 시 전년도에 준하여 지출
	대통령의 재정에 관한 긴급명령권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권한
	총괄배정예산(지출대예산)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편성
	다년도예산	회계연도에 구애받지 않고 3년 이상으로 세출예산을 운영

☞ 2016 7급 선행정학 p.663

☞ 2016 9급 선행정학개론 p.595

03. 다음 중 중앙인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영국의 내각사무처는 비독립 단독형 인사기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 ② 독립합의형 인사기관은 인사행정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
- ③ 중앙인사기관의 기능은 준입법, 준사법 기능과 집행, 감사기능을 모두 포함한다.
- ④ 비독립 단독형 인사기관은 주요 인사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
- ⑤ 독립합의형 인사기관은 인사행정의 공정성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답] ② 독립합의형 인사기관은 복수의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형태의 인사기관이므로 인사행정의 인사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이 분산되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 ① [O] 영국의 중앙인사기구는 인사위원회와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 또는 내각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내각청은 수상직속의 비독립 단독형 인사기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 독립합의형과 비독립단독형 중앙인사기관의 장단점

	독립합의형(위원회형)	비독립단독형(집행부형)
장점	· 업관주의의 영향력을 배제하여 정치적 중립과 실적제 발전에 유리 · 인사행정의 전횡과 독단을	· 인사행정의 책임소재 명확화 · 인사정책의 신속한 결정 · 행정수반이 인사행정을

	막고, 인사행정에 관한 결정의 신중화 · 위원들의 부분적 교체로 인사 행정의 계속성 확보 · 이익집단 대표자를 참여시켜 다양한 요구의 균형 있는 수용 · 다른 기관과의 밀착이나 소원한 관계를 방지하고 입법부나 일반국민 및 행정부와의 관계 원만화	도구로 국가정책의 신속, 강력한 추진 · 합의제가 아니므로 행정 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응 · 정부 기관과의 효과적인 기능적 연계
단점	· 인사행정의 책임 분산 · 인사정책의 결정 지연 · 구성원들이 양당적 혹은 초당적인 비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비능률적이고 비합리적인 결정 소지 · 반열관주의를 지향한 나머지 인사행정의 적극화 · 전문화 곤란 · 행정수반이 인사수단을 확보하지 못하여 강력한 정책추진 곤란	· 인사행정의 정치적 중립 결여로 인사행정의 연관화 방지 곤란 · 단독제 기관장의 독선적 · 자의적 결정 견제 곤란 · 기관장 교체 등으로 인한 인사행정의 일관성 · 계속성 결여 · 행정수반이 인사행정을 행정프로그램의 관리도구로 활용하기 쉬워 공무원의 권의 침해 가능성 · 인사기관이 행정수반 등에 소속되므로 양당적 · 초당적 문제를 적절히 반영하기 곤란

☞ 2016 7급 선행정학 p.474
☞ 2016 9급 선행정학개론 p.428

O4. 다음 중 민간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기관이 조사·검사·검정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된 사무 일부를 민간부문에 위탁하는 것이다.
- ② 공공서비스 전달의 비용절감 및 품질개선 등 효율성을 제고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 ③ 정치적 관점에서는 관료제가 자기조직의 이익 확대를 추구하는 목적으로 사용된 측면이 있다.
- ④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수직적으로 추진되었다.
- ⑤ 면허방식에서는 서비스 제공자들 간의 경쟁이 약할 경우 이용자 고객의 비용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답] ① 민간위탁이란 주로 조사·검사·검정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사무 일부를 민간부문에 위탁하는 것이다.

- ☑ ② [O] 경쟁입찰과정을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므로 비용절감 및 품질개선 등 효율성을 제고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 ③ [O] 우리나라의 민간위탁은 관료들이 퇴임이후의 자리보장수단으로 준정부조직 등 관변단체를 만들고 그런 조직들의 안정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가 많았다.
- ④ [O] 우리나라 민간위탁은 민간이나 지방의 필요성에서 추진된 것이 아니라 1990년대 후반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정부혁신과 인력감축이라는 정부혁신차원에서 중앙정

부가 주도적·수직적·하향적으로 추진한 것이었다.

⑤ [O] 면허방식의 한계로 맞는 지문이다.

● 주요 민영화 방법별 장단점

방식	개념	장단점(특징)
민간위탁(계약)	정부의 책임 하에 민간이 서비스를 생산	경쟁 입찰을 통한 생산 주체 선정, 정부가 비용 부담
면허	민간조직에게 일정한 구역 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를 인정	경쟁적 허가이지만 경쟁 미약 시 이용자의 비용 부담 증가 우려
프랜차이즈	독점허가(특허)	독점으로 인한 가격 인상 및 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
보조금방식	외부경제를 유발하는 생산업체(민간조직)에게 재정 또는 현물 지원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복잡할 때 이용
바우처	생산자가 아닌 빈곤계층에게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을 주어 소비자가 공급자를 선택	재분배성적 서비스의 선택이 가능
자원봉사자 방식	NGO 등 무보수 자원봉사 단체에 의한 자발적 서비스 공급(테크리에이션 등)	재정 확대 없이 서비스공급총량 증대 가능
자조활동(자기생산)	스스로 이웃끼리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자급자족(이웃감시, 주민순찰 등)	

☞ 2016 7급 선행정학 p.74
☞ 2016 9급 선행정학개론 p.69

O5. 다음 중 정책결정과 관련하여 드로(Dror)가 제시한 최적모형에서 메타정책결정 단계(meta-policy making stage)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정책결정전략의 결정
- ② 정책결정체제의 설계·평가 및 재설계
- ③ 정책집행을 위한 동기부여
- ④ 문제·가치 및 자원의 할당
- ⑤ 자원의 조사·처리 및 개발

[답] ③ 정책집행을 위한 동기부여는 정책결정이후의 결정(post-policy making)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 최적모형의 정책결정단계와 국면 - 4단계 18국면

초정책결정단계	① 가치처리 ② 현실처리 ③ 문제처리 ④ 자원의 조사·처리·개발 ⑤ 정책결정체제의 설계·평가·재설계 ⑥ 문제·가치·자원 등의 배분 ⑦ 정책결정전략의 결정
정책결정단계	⑧ 자원의 하위배분 ⑨ 우선순위에 입각한 구체적 목표 설정 ⑩ 우선순위에 입각한 중요가치군(대안의 선택기준)의 설정 ⑪ 좋은 안을 포함한 주요 대안군의 마련 ⑫ 각 대안이 초래할 주요 편익과 비용에 대한 신빙성 있는 예측 ⑬ 각 대안이 초래할 예상 편익과 예상비용의 비교 및 '최선'의 대안 발견 ⑭ 최선의 대안이 초래할 편익과 비용에 대한 평가 및 그것이 '좋은 것'이나 아니냐에 대한 결정

후정책 결정단계	⑮ 정책집행을 위한 동기부여 ⑯ 정책의 집행 ⑰ 집행 후의 정책평가
의사전달과 환류단계	⑱ 위 모든 국면을 상호연결하는 작업

- ☞ 2016 7급 선행정학 p.252
☞ 2016 9급 선행정학개론 p.234

06. 다음 중 국가의 재정지출을 조세수입에 의해 충당하는 경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현 세대의 의사결정에 대한 재정부담이 미래 세대로 전가되지 않는다.
- ② 납세자인 국민들은 정부지출을 통제하기 어렵고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요구하기 어렵다.
- ③ 조세를 통해 투자된 자본시설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자유재(free goods)로 인식돼 과다수요 혹은 과다지출되는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한다.
- ④ 과세의 대상과 세율을 결정하는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직적이다.
- ⑤ 미래 세대까지 혜택이 발생하는 자본투자를 조세수입에 의해 충당할 경우 세대 간 비용·편익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답] ② ②는 조세가 아닌 공채에 의한 재원조성의 단점이다. 조세로 재정지출을 충당할 경우 재원을 부담한 납세자인 국민들은 정부지출을 통제하기 용이하고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기도 용이하다.

- ☑ ①⑤ [O] 조세는 현세대들이 납부주체이므로 다음 세대로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거나 이득이 장기간 발생하는 경우 세대간 비용과 편익배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 ③ [O] 조세는 수익자부담주의가 적용되기 힘들므로 비용부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과잉소비 또는 과잉공급되는 경우가 많다.
- ④ [O] 조세는 과세대상과 세율 결정 등 법적절차의 복잡성·경직성이 따른다.

● 조세와 공채(차입)

	조세	공채
부담	현세대	세대간 분담
관리	간편, 비용 절감	복잡(이자상환 등)
효과	경기회복 효과 작음	경기회복 효과 큼1)
저항	큼	작음
난비	○(무임승차)	X(수익자부담)

- ☞ 2016 7급 선행정학 p.637
☞ 2016 9급 선행정학개론 p.573

<참고> 2016 예상문제선정정학 제25회 문2 문제

02 재정자원의 조달방안에는 조세, 차입(공채), 수익자부담주의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 중 조세의 장단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이자 부담이 없으며 부채관리와 관련된 재원관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장기적으로 차입보다 비용이 저렴하다.
- ② 납세자인 국민들은 정부지출을 통제하고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
- ③ 현 세대의 의사결정에 대한 재정부담이 미래 세대로 전가되어 세대간 비용부담이 공평하다.
- ④ 조세를 통해 투자된 자본시설은 자유재로 인식되어 과다수요를 유발하는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한다.

● 차입에 대한 조세의 장단점

장점	① 이자부담이 없으며 부채관리와 재원관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장기적으로 차입보다 비용이 저렴 ② 납세자인 국민이 정부지출에 직접적인 책임 요구 가능 ③ 현세대의 의사결정에 대한 재정부담이 미래세대로 전가되지 않음
단점	① 세대간 비용·편익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 ② 자유재라는 인식으로 과다수요 혹은 과다지출되는 비효율성 발생 ③ 일시적인 대규모 투자재원 동원의 의의성 결여 ④ 과세대상과 세율 결정 등 법적절차의 복잡성·경직성 ⑤ 차입에 비하여 경기회복 효과 기대 곤란

07. 다음 중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위공무원단의 일부는 공모직위제도에 의해 충원된다.
- ②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도입되지 않고 있다.
- ③ 고위공무원단은 계급제가 아닌 직무등급제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 ④ 고위공무원단의 대상은 일반직 공무원이며 별정직 공무원은 그 대상에 제외된다.
- ⑤ 고위공무원단의 성과연봉은 전년도 근무성과에 따라 결정된다.

[답] ④ 고위공무원단의 대상은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외무직)이 포함된다.

- ☑ ① [O] 고위공무원단의 직위는 개방형직위(20%이내), 공모직위(30%이내) 및 자율직위(50%이내)로 구성된다.
- ② [O] 광역자치단체 행정부지사·행정부시장 및 기획관리실장·지방교육행정기관 부교육감도 포함된다.
- ③ [O] 계급이 폐지되고 직위와 직무등급으로만 운영된다.
- ⑤ [O] 고위공무원단의 보수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로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나누어지고 성과연봉은 전년도 근무성과에 따라 결정된다.

● 고위공무원단 포함범위

구분	포함되는 공무원	제외되는 공무원
직종별	·국가직 공무원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중 외무직	·지방직 공무원 ·정무직, 기능직, 고용직 ·특정직 중 경찰, 소방, 군인
기관별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직위 포함) ·행정부 각급기관	·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 등 행정부가 아닌 헌법상 독립기관 ·감사원
정부별	·광역자치단체 행정부지사·행정부시장 및 기획관리실	·광역자치단체 정부부지사·정부부시장

장	·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부단체장
· 지방교육행정기관 부교육감	

- ☞ 2016 7급 선행정학 p.496
- ☞ 2016 9급 선행정학개론 p.447

08. 그라이너(Greiner)는 조직의 성장단계에 따라 위기가 발생하는 양상이 다르다고 보았다. 다음 중 통제의 위기를 초래하는 단계는?

- ① 제1단계 - 창조의 단계
- ② 제2단계 - 지시의 단계
- ③ 제3단계 - 위임의 단계
- ④ 제4단계 - 조정의 단계
- ⑤ 제5단계 - 협력의 단계

[답] ③ 제3단계인 위임의 단계에서는 하급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분권의 단계로 그 결과 조정력과 통제력의 상실을 초래하여 통제의 위기가 발생한다.

- ☑ ① [x] 제1단계 - 창조의 단계 - 리더십의 위기
- ② [x] 제2단계 - 지시의 단계 - 자율성의 위기
- ④ [x] 제4단계 - 조정의 단계 - 관료제의 병리
- ⑤ [x] 제5단계 - 협력의 단계 - 탈진의 위기

● Greiner의 조직성장단계와 위기대응전략



- (1) 제1단계(창조의 단계) : 소규모 신설조직단계로서 독특한 비공식 관계가 특징 ⇒ 리더십의 위기
- (2) 제2단계(지시의 단계) : 전문경영자에 의한 운영의 효율성에 초점 ⇒ 자율성의 위기
- (3) 제3단계(위임의 단계) : 권한위임에 초점 ⇒ 통제의 위기
- (4) 제4단계(조정 단계) : 조정기제를 바탕으로 통합에 초점 ⇒ 형식주의(문서주의)의 위기
- (5) 제5단계(협력의 단계) : 문제해결 및 혁신에 초점 ⇒ 탈진의 위기

- ☞ 2016 7급 선행정학 p.443
- ☞ 2016 9급 선행정학개론 p.400

09. 다음 <사례>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부가 경제적 약자보호를 위해 무주택자에게 아파트에 대한 청약우선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더니, 주택을 구입할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우선 청약권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전세를 살면서 자발적 무주택자가 되었다.

- ① 불완전 경쟁(imperfect competition)
- ② 파생적 외부효과(derived externality)
- ③ 역선택(adverse selection)
- ④ 적응적 흡수(co-optation)
- ⑤ 그레샴의 법칙(Gresham's law)

[답] ② 제시문은 정부실패의 한 원인으로 정부의 정책이

의도하지 않게 부작용을 나타내는 파생적 외부효과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 ☑ ① [X] 답합 등에 의한 일반독점
- ③ [X] 대리인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주인이 부적격자나 무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현상
- ④ [X] 조직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외부에 인적인 요소를 영입하는 생존전략
- ⑤ [X]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병리적 현상

- ☞ 2016 7급 선행정학 p.64
- ☞ 2016 9급 선행정학개론 p.61

10.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②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다.
- ③ 조례개폐청구제도는 지방선거의 유권자 중 일정 수 이상의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및 개폐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④ 주민투표제도는 지역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들 중 지방자치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들에 대해 주민들의 직접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⑤ 주민소환제도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중 일정 수 이상의 서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혹은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제외) 등을 소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답] ④ 지역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등 주민투표의 구체적인 대상은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 ① [O]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설명하는 지문으로 맞는 지문
- ② [O]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 ③ [O]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지문
- ⑤ [O] 주민소환대상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 ☞ 2016 7급 선행정학 p.701
- ☞ 2016 9급 선행정학개론 p.629

11. 다음 중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수입대체경비
- ② 선박의 운영·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 ③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급하는

경비

- ④ 범죄수사 등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 ⑤ 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답] ① 수입대체경비는 긴급배정 대상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 긴급배정 가능 대상경비

- ①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 ② 선박의 운영·수리 경비
- ③ 교통·통신이 불편한 지역에서의 경비
- ④ 부식물의 매입경비
- ⑤ 범죄수사 등 특수활동경비
- ⑥ 여비
- ⑦ 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요하는 공공사업비
- ⑧ 재해복구비

☞ 2016 7급 선행정학 p.661
 ☞ 2016 9급 선행정학개론 p.593

12. 다음 중 우리나라의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②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는 범위 안에서 그 회계연도부터 10년 이내로 정하여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 ③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답] ② 계속비는 원칙적으로 5년이며 사업의 규모나 재정여건 상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10년 예외로 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연장은 국회의결이 필요하다.

● 국가재정법 관련조문

- 제23조(계속비)
- ①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2항의 지출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 ① [O] 예비비에 관한 지문으로 맞는 지문
- ③ [O] 이월에 대한 원칙적 입장으로 맞는 지문
- ④ [O] 질적 한정성 목적의 원칙을 표명한 지문으로 맞는 지문

⑤ [O] 전용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지문

☞ 2016 7급 선행정학 p.664
 ☞ 2016 9급 선행정학개론 p.594

13. 다음 정책집행 수단으로서 바우처(voucher)제도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 대응성을 제고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다.
- ② 시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공급주체를 활용한다.
- ③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에게 서비스의 선택권을 부여한다.
- ④ 공급자 간 경쟁을 촉진시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
- ⑤ 민간부문을 활용하지만 여전히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답] ③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쿠폰을 지급함으로써 서비스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우처는 소비보조금이라고도 불린다.

- ☑ ① [O] 바우처의 재분배적 성격을 설명한 것으로 맞는 지문
- ② [O] 공급까지도 민영화된 방식이므로 맞는 지문
- ④ [O] 소비자가 공급자를 선택하므로 맞는 지문

● 주요 민영화 방법별 장단점

방식	개념	장단점(특징)
민간위탁(계약)	정부의 책임 하에 민간이 서비스를 생산	경쟁 입찰을 통한 생산주체 선정, 정부가 비용 부담
면허	민간조직에게 일정한 구역 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를 인정	경쟁적 허가이지만 경쟁미약 시 이용자의 비용부담 증가 우려
프랜차이징	독점허가(특허)	독점으로 인한 가격 인상 및 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
보조금방식	외부경제를 유발하는 생산업체(민간조직)에게 재정 또는 현물 지원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복잡할 때 이용
바우처	생산자가 아닌 빈곤계층에게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을 주어 소비자가 공급자를 선택	재분배성적 서비스의 선택이 가능
자원봉사자 방식	NGO 등 무보수 자원봉사 단체에 의한 자발적 서비스 공급(레크리에이션 등)	재정 확대 없이 서비스공급총량 증대 가능
자조활동(자기생산)	스스로 이웃끼리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자급자족(이웃감시, 주민순찰 등)	

☞ 2016 7급 선행정학 p.71
 ☞ 2016 9급 선행정학개론 p.68

14. 다음 중 우리나라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관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소속된 중

- 양행정기관에 심의회를 둔다.
- ② 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③ 소속 중앙행정기관과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 간의 전보, 개인별 상여금 차등 지급 등이 가능하다.
 - ④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한다.
 - ⑤ 기관장은 임기를 정하지 않고 임명한다.

[답] ⑤ 소속책임운영기관은 5년 이내, 1년 이상 범위 내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 ☑ ① [O]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지문
- ② [O]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는 자율화(기본운영규정)
 - ③ [O] 책임운영기관 소속직원은 신분이 공무원이므로 맞는 지문
 - ④ [O] 자율 + 성과 + 책임이 조화된 조직이므로 맞는 지문

☞ 2016 7급 선행정학 p.401
☞ 2016 9급 선행정학개론 p.366

15. 다음 중 던리비(Dunleavy)의 관청형성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니스카넨(Niskanen)의 예산극대화 모형을 비판한 모형이다.
- ② 관료들의 효용은 소속기관의 통제하는 전체 예산액 중 일부분에만 관련된다.
- ③ 고위직 관료는 금전적 편익보다는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업무환경에서 오는 효용을 증진시키는 데 더 큰 관심을 갖는다.
- ④ 합리적 관료들은 소규모의 엘리트 중심적이고, 정치권력의 중심에 접근해 있는 부서에서 참모기능수행을 원한다.
- ⑤ 통제기관의 경우 예산이 증가할수록 권력이 커지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하려는 성향이 높게 나타난다.

[답] ⑤ 던리비(Dunleavy)는 니스카넨(Niskanen)의 예산극대화 모형을 비판하면서 예산극대화 동기는 기관의 성격과 예산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통제기관과 사업예산의 경우에는 예산극대화 동기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 ①② [O] 예산극대화 동기는 기관의 성격과 예산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하며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모형을 비판
- ③④ [O] 고위관료는 예산보다는 책임은 덜 하고 권한은 강한 참모기능수행을 원한다고 본다.

☞ 2016 7급 선행정학 p.147
☞ 2016 9급 선행정학개론 p.141

16. 다음 중 현행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 ②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③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④ 수사기관이 현행범인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답] ④ 현행범인 공무원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미리 통보할 필요가 없으며 그 경우 직장이 탈금지의 의무에 위배되지도 않는다.

- ☑ ①②③⑤ [O] 국가공무원법상 규정된 내용으로 모두 맞는 지문

● 공무원 윤리의 법적 근거

자율규제윤리	공무원윤리현장
헌법	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짐 ②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은 법률로 보장된다.
국가공무원법	① 성실의무 :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 수행 ② 복종의무 :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 ③ 직장이탈금지의무 ④ 친절·공정 의무 ⑤ 종교중립의 의무 (2009.1) ⑥ 비밀엄수의무 ⑦ 청렴의무 ⑧ 영예 등의 수령규제 ⑨ 품위유지의무 ⑩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⑪ 집단행위금지 ⑫ 정치활동금지 ⑬ 선서의 의무
법령적·강제적·규제윤리	① 재산등록 및 공개의무 • 재산등록의무 : 4급 이상(고위공무원단 포함)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정무직, 공기업 등의 장과 부기관장, 감사 등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보유재산을 등록 • 재산공개의무 : 1급 이상, 정무직,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감사 등은 이를 공개해야 한다. ② 선물수수 금지 ③ 취업제한의무 : 재산등록의무자이던 공직자 등은 퇴직 전 5년 이내에 담당했던 직무와 관련 있는 기업체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은 취업할 수 없다. ④ 이해충돌방지금지 : 공직자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업무수행이 곤란치 않도록 해야 함 ⑤ 주식·채권·채권지급 : 재산공개대상자와 기재부·금융위 소속공직자는 일정금액 이상의 주식을 매각 또는 채권 신탁하여야 한다.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 설치운영법	① 공직내부비리 발견 시 신고할 의무 ②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 취업제한 : 퇴직 전 5년간 담당했던 직무와 관련된 공기업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한다.

☞ 2016 7급 선행정학 p.559
☞ 2016 9급 선행정학개론 p.504

17. 다음 중 현행 「정부조직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각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서울지방경찰청
- ② 부산지방우정청
- ③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④ 부산지방중소기업청
⑤ 충청지방통계청

[답]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통령소속의 행정각부가 아닌 국무총리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일선기관)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모두 대통령소속의 행정각부 또는 그 소속외청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 ☑ ① [O] 행정자치부 - 경찰청 - 지방경찰청
② [O] 미래창조과학부 - 우정사업본부 - 지방우정청
④ [O] 산업통상자원부 - 중소기업청 - 지방중소기업청
⑤ [O] 기획재정부 - 통계청 - 지방통계청

☞ 2016 7급 선행정학 p.398
☞ 2016 9급 선행정학개론 p. 364

18. 다음 중 스마트사회의 전자정부에서 강조되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민집단수요 중심의 맞춤형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을 강조한다.
② 모바일 기술에 의해 현장근무, 재택근무 등의 유연근무가 촉진된다.
③ 국민들이 민원서비스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국민의 요구들을 미리 파악해서 행정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한다.
④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재난사고 등에 대해 사전예방 위주의 위기관리를 강화한다.
⑤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필요한 경우 원하는 방식으로 정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답] ① 스마트정부는 전자정부 2.0과 3.0을 포함한 말로 시민집단수요 중심의 서비스가 아니라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강조한다.

- ☑ ②③④⑤ [O] 스마트정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모두 맞는 지문

● 기존 전자정부와 스마트 정부의 비교

		기존 전자정부 (~2010)	스마트 정부(2011~)
국민	접근 방법	·PC만 가능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TV 등 다매체
	서비스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서비스	·개인별 맞춤형 통합 서비스 ·개방을 통해 국민이 직접 원하는 서비스 개발·제공
	민원 신청	·개별 신청 ·동일서류도 복수 제출	·1회 신청으로 연관 민원 일괄 처리
	수혜 방식	·국민이 직접 자격 증명 신청	·정부가 자격 요건 확인·지원
공무원	근무 위치	·지정 사무실(PC)	·위치 무관(스마트 워크센터 또는 모바일 오피스)
	업무	·사후 복구 (재난)	·사전 예방 및 예측

☞ 2016 7급 선행정학 p.733
☞ 2016 9급 선행정학개론 p.655

19. 조직 내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ㄱ. 갈등은 조직에 항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적절한 방안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
ㄴ. 갈등관리 방안 중 협동(collaboration)은 갈등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것으로 분명한 승자나 패자가 없다.
ㄷ. 업무의 상호의존성이 높을수록 갈등이 증가할 소지가 크다.
ㄹ. 갈등해소를 위한 경쟁(competition)전략은 신속하고 결단력이 필요한 경우나 구성원들에게 인기 없는 조치를 실행할 경우 사용될 수 있다.
ㅁ. 조직이 무사안일에 빠져있을 경우에는 타협(compromise)을 통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 ① ㄱ, ㅁ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ㅁ
⑤ ㄷ, ㄹ, ㅁ

[답] ④ ㄱ, ㄴ, ㅁ은 틀리다.

- ☑ ㄱ [X] 오늘날 갈등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므로 항상 부정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반드시 해소대상이라고 볼 수도 없다.
ㄴ [X] 협동(collaboration)이 아니라 협상(bargaining)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ㄷ [O] 의존관계가 높을수록 갈등이 생길 소지가 크다.
ㄹ [O] 경쟁은 상대방에 대한 협조·배려보다는 자신의 입장만을 관철시키려는 강제전략으로 신속하고 결단성 있는 행동이 요구될 때나 인기 없는 정책을 실행할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ㅁ [X] 조직이 무사안일이나 침체에 빠져 있을 때에는 갈등을 해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조성하여야 한다.

● Thomas의 갈등해소 전략

		타인의 욕구		
		비협조적	중간	협조적
자신의 욕구	단정적	경쟁		협동
	중간		타협	
	비단정적	회피		순응

☞ 2016 7급 선행정학 p.347
☞ 2016 9급 선행정학개론 p.320

20. 다음 중 아른슈타인(Arnstein)이 제시한 주민참여의 8단계론 중 명목적(형식적) 참여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조작(manipulation)
② 치료(therapy)
③ 협력(partnership)
④ 정보제공(informing)
⑤ 주민통제(citizen control)

[답] ④ 아른슈타인(Arnstein)은 주민참여의 발달단계를 크게 3단계, 세부적으로 8단계로 구분하였다. 정보제공 등은 상징적(형식적) 참여단계에 해당하는 참여전략이다.

- ☑ ①② [X] 1단계인 실질적 비참여단계에 해당
 ③⑤ [X] 3단계인 실질적 참여단계에 해당

● S.R.Arnstein의 행정참여단계

1단계 (하위단계)		2단계(중간단계)			3단계(상위단계)		
① 조작 (일방 설득)	② 치유 (욕구 분출)	③ 정보 제공 (일방 홍보)	④ 상담 (공청)	⑤ 회유 (토론)	⑥ 동업자 관계 (민관협력)	⑦ 주민 권력 위임 (주민 우위)	⑧ 시민 통제 (주민 자치)
실질적 비참여		상징적 참여			실질적 참여		

- ☞ 2016 7급 선행정학 p.701
 ☞ 2016 9급 선행정학개론 p.629

21. 다음 중 점증주의적 정책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점증주의는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결정의 실상을 비교적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②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과 다원주의의 정치적 정당성을 정교하게 결합시켰다.
 ③ 정치적 갈등을 줄이고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여, 정책결정과 집행을 용이하게 한다.
 ④ 상황이 복잡하여 정책대안의 결과가 극히 불확실할 때, 지속적인 수정과 보안을 통해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다.
 ⑤ 비가분적(indivisible) 정책의 결정에 적용하기 용이한 모형이다.

[답] ⑤ 비가분적 정책이란 분할할 수 없는 비분할적 정책으로 점증모형보다는 합리모형이 적합하다. 점증모형은 정책을 요소별로 분할하여 가지치기하는 지분법(branch approach)을 적용한다.

- ☑ ① [O] 점증주의는 현실적이고 실증적인 모형이므로 맞는 지문
 ② [O] 점증주의는 제한된 합리성을 수용하면서 정치적 합리성을 결합시킨 것이므로 맞는 지문
 ③ [O] 한정된 대안과 결과만 검토하므로 갈등을 줄이고 결정을 간소화
 ④ [O] 점증주의는 정책상황이 불확실하여 예측이 곤란할 때 사용하는 모형이므로 맞는 지문

●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비교

합리모형	점증모형
기득권(현실, 매몰비용) 불인정	기득권(현실, 매몰비용) 인정
목표·수단의 연쇄 불인정(목표·수단의 구분) - 논란 있음	목표·수단의 연쇄(통합)인정 - 논란 있음
목표수단분석 실시(수단은 목표에 합치되도록 선택)	목표수단분석의 미 실시(목표를 수단에 합치되도록 수정)
전체적 최적화	부분적 최적화
비분할적·포괄적 결정	분할적·편린적 결정
근본적 결정(root approach)	지엽적 결정(branch approach)
조직간 장벽 제거	조직간 구분 인정
사업별 편성	조직별 편성
참여 불인정(소수에 의한 폐쇄적 결정)	참여 인정(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동의의 극대화)
하향적 결정	상향적 결정
단발적 결정(문제의 재정의가 없음)	연속적 결정(문제의 재정의가 빈번)

없음)	빈번)
쇄신적·근본적 변화	점진적·한계적 변화
연역적 접근(algorithm), 이론에 의존	귀납적 접근(heuristic), 이론에 의존하지 않음
확실한 상황	불확실한 상황
개도국에 적용(불안정한 사회)	선진국에 적용(안정된 사회)
경제적 합리성(목표달성의 극대화)	정치적 합리성(바람직하지 않은 상황 수정)
정책문제간 상호연관성 낮음	정책문제간 상호연관성 높음
정책의 분할가능성 낮음	정책의 분할가능성 높음
해결하려는 문제 자체에 초점(폐쇄적)	문제자체보다는 정책환경에 초점
모든 관련요소를 포괄적으로 분석	분석의 대폭적 제한(중요한 가치·대안·결과가 무시)

- ☞ 2016 7급 선행정학 p.249
 ☞ 2016 9급 선행정학개론 p.230

22. 다음 공공기관 중 위탁집행형으로 구분되지 않는 것은?

- ① 한국가스안전공사
 ② 한국산업인력공단
 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④ 한국고용정보원
 ⑤ 국민연금공단

[답] ⑤ 국민연금공단은 준정부기관 중 기금관리형에 해당한다.

- ☑ ①②③④ [O] 모두 준정부기관 중 위탁집행형 기관으로 맞는 지문

● 공공기관의 유형(실정법상 구분)

공 기 업	시장형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
	준시장형	철도공사, 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위탁집행형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기타공공기관		

- ☞ 2016 7급 선행정학 p.404
 ☞ 2016 9급 선행정학개론 p.370

23. 다음 중 민간투자 방식인 BTO와 BTL의 상대적 특징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BTO는 민간의 수요위험을 배제한다.
 ② BTO의 사업운영주체는 민간사업시행자이다.
 ③ BTL에서는 정부의 시설임대료를 통하여 투자비를 회수한다.
 ④ BTL은 최종수요자에게 부과되는 사용료만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 실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⑤ BTO에서는 예상수입의 일부를 보장해 주는 최소수입보장제도가 적용되기도 하나 우리나라

라의 경우 부작용으로 인해 폐지되었다.

- [답] ① BTO는 수익도 발생하지만 위험부담도 일차적으로 민간이 담당한다. 따라서 적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적자보전협약에 의하여 최소운영수익보장제도(MRG)를 운영한다.
- ☑ ② [O] BTO나 BOT는 운영주체가 민간이다.
- ③ [O] BTL이나 BLT는 정부가 운영주체이며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아 투자비를 회수한다.
- ④ [O] BTL이나 BLT는 수익이 별로 발생하지 않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므로 맞는 지문
- ⑤ [O] BTO나 BOT의 경우 최소운영수익보장제도(MRG)의 폐단으로 인해서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 민자유치방식

구분	BOT	BTO	BLT	BTL
전제	• 민간이 운영 (기업은 시설대상자산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사용료 수익을 소비자로부터 받는 방식)		• 정부가 운영 (기업은 Lease 대상자산을 기초로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를 정부로부터 받는 방식)	
사례	• 수익사업 (주차벌당처럼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 • 민간이 위험을 부담함 • 최소수입운영(MRG) 보장 - by 적자보전협약		• 비수익사업 (공공임대주택, 수목원, 노인요양시설 등 투자비 회수가 곤란한 시설) • 민간에게는 위험 부담이 거의 없음, MRG제도 없음	
운영기간 동안 시설소유주체	민간	정부	민간	정부
소유권 이전 시기	운영종료 시점	준공 시점	운영종료 시점	준공 시점

- ☞ 2016 7급 선행정학 p.75
- ☞ 2016 9급 선행정학개론 p.71

24. 다음 중 현행 「국가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법」 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
- ② 비례대표 국회의원
- ③ 서울대학교 총장
- ④ 세종특별자치시장
- 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답] ③ 일반적으로 국립대학교 총장 및 교수 등은 국가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 신분이지만 서울대학교의 경우 2014.7 법인화되어 현재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하여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 ☑ ①② [O]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국가공무원
- ④⑤ [O] 지방공무원법상 정무직 지방공무원

- ☞ 2016 7급 선행정학 p.483
- ☞ 2016 9급 선행정학개론 p.437

25. 다음 중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의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② 대표관료제는 관료 조직 내의 내부통제를 약화시킨다.
- ③ 대표관료제는 사회경제적 인구구성을 반영토록 하여 해당 관료가 출신집단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 ④ 대표관료제는 할당제와 역차별로 인한 사회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
- ⑤ 대표관료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형평성을 지향한다.

[답] ② 대표관료제는 공식사회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출신집단별로 할당하여 공직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이는 약화된 외부통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출신집단별로 공직을 구성함으로써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 대표관료제의 특징과 한계

- 실적제와의 상충
- 행정의 전문성·생산성 저해
- 제사회화(공직입문 후 신념 변화) 불고려
- 역차별 우려 : 기회의 공평 저해
- 외부통제 무력화 : 국민참여나 협력적 통치(거버넌스)등 저해
 - ⇒ 국민주권원리에 반함
- 경험적 입증 부족 : 능동적 대표
- 구성론적 대표의 기술적 한계
- 특정집단에의 악용 : 집단이기주의
- 정부규모 팽창 소지 → 감축관리· NPM 등 생산성·효율성이 강조되는 행정과 충돌

- ☞ 2016 7급 선행정학 p.471
- ☞ 2016 9급 선행정학개론 p.425